

## 가시권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금수해제와 국내산 젖소 및 육우의 가격

한·미 BSE(광우병) 전문가 회의가 올 들어 잇따라 열리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가 이뤄질 지, 이뤄진다면 언제쯤 일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이후 젖소 및 육우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금지가 해제되면 젖 소 및 육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가시권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금수해제와 국내산 젖소 및 육우가격을 집중 진단한다.

### ■ 한·미 BSE전문가 회의 어떤 사항들이 논의 됐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올 들어 2월과 4월, 그리고 6월 등 세차례에 걸쳐 BSE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6~10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제3차 한·미 BSE 전문가회의는 현지조사와 함께 미국산 쇠



이종순  
농민신문 농정부 부장대우

고기 수입검역과 관련된 사항이 논의됐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대표로 수의·의학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은 3일 동안 미국 농업부 국립수의연구소(NVSL)의 BSE 검사상황, 육골분 생산시설과 사료공장의 육골분 사용실태, 소 사육농장의 BSE 예방관리 및 도축장의 특정위험부위(SRM) 제거작업 등 실태를 조사했다.

3차 전문가협의회에서는 또 △ 미국 내 BSE 감염소를 조기에 색출해 낼 수 있는 예찰조사사업의 지속적인 실시 △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한 SRM 제거 △ 소의 이력을 알 수 있는 개체식별제도의 조기 시행 △ 금년에 개정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SE 규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3차까지의 회의결과와 현지조사 내역을 조만간에 열릴 가축방역협의회에 상정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심의를 한다. 여기에서 수입재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이 결정될 경우 한·미 고위 당국자간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위 당국자간 협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6월 10일 BSE 검사에 반응을 보인 소 한마리가 미국에서 확인됐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BSE 고위험군 37만5,000마리가 이상에 대해 간이검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 BSE 검사에 반응을 보인 소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3건 중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3건의 사료는 BSE 확진법 중 하나인 면역화학조직검사법(IHC)에 의해서 음성으로 진단됐으나, 농업부 감사실 권고에 따라 유럽에서 사용중인 웨스턴 블로트(Western blot) 검사법을 적용한 결과, 1건이 양성인 것으로 진단됐다.

미국 농업부는 이 두가지 검사결과가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웨이브릿지에 위치한 국제수역사무국이 인정하는 BSE 표준진단실험실에 확진검사를 의뢰하고 자체 추가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상태인 만큼 당장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지만 확진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서 우리 측이 취할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19~21일에는 경기 안양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 여부를 논의하는 2차 광우병 전문가협의회가 열렸다.

2차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양측은 소비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바탕위에서 소 해면상뇌증(BSE) 위험도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 미국내 BSE 위험도 ▲ BSE 감염방지를 위한 반추동물 사료규제 및 교차오염 방지조치 ▲ BSE 감염소를 색출해 내는 예찰 프로그램 ▲ 도축장 및 가공장의 특정위험부위(SRM) 제거와 처리방법 ▲ 농장까지 추적이 가능한 개체식별시스템에 대해 중점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또 현재까지 전문가협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미국의 강화된 예찰 프로그램, 특정위험부위(SRM) 제거조치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데 이해를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사료의 교차오염 가능성 등 한국 측이 제기한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미국 측의 위험완화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2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미국이 BSE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BSE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감염원이 미국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현행 사료 규제 등 강화된 BSE 방역조치에 의해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영국산 수입생우를 추적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국에서 테어난 소에서는 BSE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측은 미국 내에서 닭과 돼지용 사료에 포함된 반추동물 육골분이 생산·유통과정 및 급여과정에서 반추동물 사료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소 사료에 소의 육골분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 생산라인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사료제조 전후에 세척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료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예찰강화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검색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미국



측은 예찰강화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강화조치를 중단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예찰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전문가 협의회에 우리나라는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을 수석대표로 농림부,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램버트(Chuck Lambert) 농무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동식물검역소·식품의약청 및 식품안전검사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지난 2월 28일에도 한국과 미국은 1차 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2차 회의를 갖기로 했었다.

1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는 국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협의회, 가축방역대책협의회, 당국자 협상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2004년 6월부터 강화해 시행중인 BSE 예찰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본과는 2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우리 측에 설명했다. 또 가능한 신속한 절차가 진행되기를 희망했었다.

### ■ 미국과 일본, 미국과 대만간의 BSE 협의 결과

미국과 일본 간에도 수차례 전문가협의회가 열렸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 4차 미·일 고위급 회의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 20개월령 이하로 증명되는 소에

서 생산된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뇌와 척수 등 특정위험부위(SRM)는 모든 월령의 소에서 제거한다 ▲ 미국은 쇠고기 수출증명(BEV)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자국 내 승인절차에 착수하며 앞으로 BSE가 발생되더라도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정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등이다.

미국과 일본이 교역대상 소를 2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한정한 것은 일본이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BSE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성(同等地) 원칙에 따라 미국도 전두수를 검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전 두수 검사가 불가능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에 따라 20개월령 이하에 한해서 교역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이 문제를 올 7월에 재검토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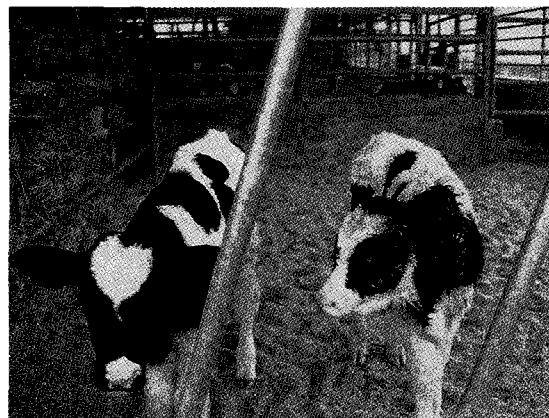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올 3월말에 20개월령 이하의 소를 BSE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전 두수 검사 완화대책을 승인했다.

미국과 대만간에는 협의가 이뤄졌다.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칙적인 수입재개 방침을 2004년 10월에 발표한 이후 미국과 3차례 전문가회의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2004년 3월에 대만에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청했었다.

대만은 위생부 소속 식품안전위원회 전문가 심의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올 4월 16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었다.

수입조건은 30개월령 이하의 육용품종 소에서 나온 쇠고기 일 것, 내장·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 일 것, 미국 농업부가 심사한 이후 대만 위생소에 이미 통보한 도축장과 가



공장에서 도축 및 가공된 쇠고기 일 것, 쇠고기 수입시 미국 농업부의 위생증명 서류가 첨부된 것 일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수입재개 품목은 뼈를 제거한 갈비, 허리살, 허리상부살, 둔부 등 16개 품목이다.

대만의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만9,200톤으로 금액으로는 7,600만달러 어치였다.



### ■ 미국산 쇠고기 금수 해제 관련, 전망

국제수역사무국이 5월 총회에서 BSE와 관련한 수입안전기준을 크게 완화한 데다 대만이 최근 30개월령 미만의 도축 소 가운데 뼈를 제거한 갈비·허리살 등에 대해 수입을 공식 허용하고, 일본이 2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점 등 주변 여건이 우리나라에도 압력이 될 전망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은 동물위생규약을 개정, 특정 조건하에서 뼈가 제거된 30개월령 이하의 소 살코기는 BSE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역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논의는 우선 소비자·생산자단체·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전문기술적 검토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여부를 위한 여론 수렴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앞으로 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부 축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협상 종료시까지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정보 수집과 분석, 회의의제 발굴, 국내 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을 담당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양국 정책 담당자간 협상이 진행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라는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고시하는 것으로 금수조치는 완전 해제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축방역협의회가 열려도 단

기간에 의견 일치가 어렵고 관련규정을 만드는데도 최소한 2개월 가량 시간이 걸려 수입재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 ■ 미국산 쇠고기 금수해제 대비책은?

정부와 축산단체들은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공조하고 있는 데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도 의원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들 또한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면서 식품위생법개정안 통과 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6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는 여야의원들이 대거 참석,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면서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원산지 정보 부족은 식용육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소비자와 농민이 피해자가 됐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일현 의원은 “육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요식업, 무엇보다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하루빨리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인기 의원도 “일반 음식점에서도 육류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면 소비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국산육 판매촉진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공청회에 참석,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농축산물 고급화 촉진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입에 힘을 실어 주었고, 김광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원산지표시제는 둔갑판매 방지와 위해식품의 추적 및 회수를 보다 쉽게 해 육류유통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찬길 건국대 축산대 교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국내외 가격차가 커 둔갑판매 등이 문제되고 있는 쇠고기에 대해 우선 도입하고 대형음식점부터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원산지 표시제 대상 식육의 종류와 표시대상 영업장과 관련, 이같이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단속의 실효성과 관련, “음식점에서 식육거래 기록과 보관을 의무화하면 유통경로를 따라 추적조사가 가능한 데다 보조수단으로 디엔에이(DNA) 감별법을 적극 활용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즉 DNA 감별법은 한우와 젖소는 100%, 한우와

수입육은 95.8%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초기단계에서는 제도 시행만으로 자정기능이 기대되는 만큼 단속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해 계도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 교수는 또 통상마찰 가능성과 관련, “수입산에 대해 표시방법을 달리 하거나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반소지가 있으나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를 동일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어 육류의 전 공급과정 중에서 소비유통의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식생활 안전, 경제적 손실 최소화 등 소비자들의 복지 보호는 물론 육류 유통의 투명성 제고로 국산 육류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수요건”이라고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도 음식점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민상현 음식업중앙회 부회장을 제외한 남호경 한우협회장,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이정호 농협중앙 상무, 황선옥 소시모 상임이사 등 토론

|          | 수입이자(2개월형) | 초산우       | 4산우       | 육우(500kg) |
|----------|------------|-----------|-----------|-----------|
| 2003년    | 720,000    | 1,873,000 | 1,408,000 | 1,635,000 |
| 2004년    | 617,000    | 1,901,000 | 1,289,000 | 1,721,000 |
| 2005년 3월 | 702,000    | 2,231,000 | 1,491,000 | 2,079,000 |
| 2005년 5월 | 754,000    | 2,391,000 | 1,515,000 | 2,095,000 |

자들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도 확대된다.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 한 후 정보를 입력, 데이터베이스화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 2월 판매장에서 쇠고기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3월 30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 클럽에서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 ■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이후 상승중인 젖소 및 육우가격

현재 육우나 젖소, 송아지 가릴 것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원유값 인상이 산지 젖소 및 육우 가격의 상승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젖소 및 육우가격 값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젖소농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젖소산지가격동향에 따르면 500kg 기준 육우가격은 2003년에는 163만 5,000원까지 하락했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이후인 2004년은 172만1,000원으로 상승했고, 올 5월은 209만5,000원으로 상승했다.

송아지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2개월령 육우 송아지 가격은 지난해는 61만7,000원이었으나 올 5월은 75만4,000원으로 상승했다. 2개월령 암송아지 역시, 올 5월은 62만6,000원에 거래돼 2004년 평균값인 58만1,000원보다 높다. 초산우 가격도 올 5월은 239만1,000원으로 지난해 190만1,000원보다 49만원이 올랐다.

### ■ 젖소 및 육우가격값, 상승요인은

육우가격 강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에 따른 대체 소비효과가 크게 작용한 데다 거세 등 고급육 생산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김성호 차장대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에 따라 대체 소비효과로 육우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이에 따라 한우 송아지보다 값이 싼 젖소 송아지를 밀소로 구입해 사육하려는 농가들이 늘면서 수송아지 값도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젖소 가격은 지난해 이뤄진 원유값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 초산우의 경우는 사육마릿수가 줄어든 데다 한우수정란 이식을 통해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다. 또 다산우 가격의 상승 역시 원유가가 인상되고 배합사료 가격이 잇따라 인하되면서 경영여건이 다소 호전됐기 때문이다.

### ■ 젖소 및 육우가격 전망은

육우와 수송아지 가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맞물려 있다. 정민국 농경연 축산관측팀장은 “육우 가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돼 수입량이 늘어날 경우 한우 값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출하 예상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고급육 생산이 가격영향을 덜 받게 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은 젖소값은 당분간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지만 원유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원유집유체계 개편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

〈필자연락처 : ☎ 02-3703-6118〉